

법과 정치

뿌리 뽑기

이름 :

Contents

1. Intro & Caution
2. I 민주 정치와 법
3. II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4. III 헌법의 기본 원리
5. IV 개인 생활과 법
6. V 사회 생활과 법
7.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Intro

이 책은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법과 정치 수험생을 위한 자료입니다. 저자는 여러 수험생을 위한 사이트나 여러 교재들을 접해 본 뒤에, 법정 만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해 보았습니다. 수험생들중 일부는 “법과 정치는 내용이 너무 많다.” 또는 “선거구 문제만 풀면 50 점 나올 수 있겠는데 .. 수학이 부족해서 ..” 물론 둘 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법과 정치 만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내용을 이해하고, 선거구 문제에 대한 완벽한 연습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법과 정치는 선거구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타임 어택이라는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할까 .. 라는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한 답은

“완벽한 선지 분석 을 통해 어떤 선지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자!”

였습니다. 실제로 저는 작년 수능을 치면서, 저 혼자 정리한 선지 분석이 많은 도움이 되었고, 선거구 문제를 완벽하게 다 풀어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 선지 분석 자료는 법과 정치 시험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입니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헛갈려 했던 선지들, 지엽적인 선지들, 반드시 수능장에 알고 가야 할 선지들, 등등..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거구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한 선지 분석을 토대로, 선거구 문제의 끊임 없는 노력이 이루어 진다면, 수능장에서 당당히 만점을 받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Caution

이 자료는 수능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적인 선지 분석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개념을 꼼꼼하게 1 회독 이상 한 상태에서 보시는게 좋습니다. 위에서 이 자료는 수능 사탐 만점을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설 및 봉투 모의고사에 나온 선지까지 모두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낙 지엽적이고 수능을 위한 큰 도움을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기출과 EBS 만 꼼꼼히 분석해도 사탐 만점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지엽적인 선지까지 건드느냐.. 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수능이 다가오면 다가 올 수록 특히 사탐에 대해 예민해지고 이것까지 안 보면 수능에서 틀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N 수생 이라면 누구나 한번 짚겨어 볼 만한 생각이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 수능 직전에 선지 분석 모음 자료를 만들었는데 되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숙지한 채 이 자료와 함께라면, 수능 사탐 만점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정독하시고, 모의평가나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갈 훌륭한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탈자가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https://open.kakao.com/o/sPdAcp8>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봅시다!

I 민주 정치와 법

- (1) 정치의 의미와 기능
- (2) 민주 정치의 발전
- (3) 법치주의와 민주 정치
- (4)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특징과 과제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정치^의 의미 (넓은 의미 Vs 좁은 의미),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고대 아테네, 근대, 현대), 사회 계약설 (홉스, 로크, 루소), 법치주의 (형식적 Vs 실질적), 민주 정치 형태 (직접 민주제 Vs 간접 민주제) 가 있습니다.

정치 체계론은 기출에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소재가 되었지만, 기출 문제 풀 때 이 정도 도구만 가지고 풀 수 있을 겁니다.

1. 좁은 의미의 정치에 부합하는 정치 현상은 근대 이전에도 나타났습니다 .

2. 정치의 의미에서 , 헛갈리는 선지가 나오면 다시 꼼꼼하게 읽어볼 것

(정치의 본질적 의미를 묻는 선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때 집합의 포함관계를 떠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3. 정당은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 체계론에서 산출의 기능을 담당하지 않고, 투입과 환류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4. 정치 체계론에서 민주적 국가가 '무엇을 무엇보다 더 중시한다' 는 모두 틀린 선지입니다.
(환류를 산출보다 더 중시한다와 같은 선지)

5.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가 공식적 정책 결정 기구에게 의사를 표출 (법률안 거부권) 하는 것은 정치 체계론에서 **산출**의 기능입니다.

6. 고대 아테네 민주 정치 체계에서 대표를 선출할 때 탁월성, 전문성, 대표성, 적합성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추천제나 윤번제로 선출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작년 6월 선지인데 **민회**의 구성원은 **선출**하는게 아닙니다. 모든 자유민 남성은 민회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입니다.)

7. 시민에게 주어진 **정치 참여 기회** (고대 > 현대 > 근대) 는 직접 민주제 정도를 설명하므로, **정치 참여자의 다양성** (현대 > 근대 > 고대) 과 구분하도록 합시다.

8.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의 **공통점** 을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 국가는 수단이자 개인 권리 보장이 목적, 국가는 자연 발생 X, 개인주의, 실정권, 자발적 합의, 개인단위로 사회 계약 체결, 인위적 질서.. 등 다 외웁시다.

9.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의 원리** 는 직접 민주주의, 간접 민주주의 모두에 해당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원리** 니까요.

10. 사회 계약설 문제를 풀 때는 제시문에 꽂히지 말고, 제시문의 **키워드 중심** 으로 누구의 의견인지 적어두고 시작합시다.

11. 루소는 국가가 특수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의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인 공동체의 이익과 선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과거 기출)

12. 루소는 사회 계약을 통해서 자연 상태로 회귀하자고 주장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성선설을 바탕으로 개인을 생각하지만, **사적 소유로 인한 불평등**으로 사회 계약을 체결해서 평화로운 자연 상태로 회귀할 것을 주장합니다.)

13. 법치주의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보다 공동체의 목적 달성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도 그렇습니다.)

14. 법으로 **기본권을 제한** 할 수 있다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모두 맞지만, 법으로 **기본권의 본질을 제한**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에서 틀린 선지입니다.

15. **법치주의**는 정치권력에 대한 법의 우월성 여부가 **통치자에 의해 결정 (인치)** 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16. **국민, 주민 자치의 원리**가 실현되는 것은 직접, 간접 민주제 모두 맞지만 이는 직접 민주제에서 **조금 더 충실하게** 실현됩니다.

17. **다수결의 원칙**은 직접, 간접 민주제 모두 긍정합니다.

18. 법치주의는 민주 정치와 법치주의는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수특에서 이 두 개 사이의 관계에 역동성과 안정성 사이의 긴장이 흐른다고 봅니다.)

19. 다수에 의한 지배는 자기 지배의 원리와 같은 말입니다. (수특)

20. 사회 계약설은 자연권을 확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권을 보존하려고 합니다.

21. 인치는 **합법적** 독재가 **아닙니다**. 합법적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기 때문입니다.

II 민주 정치 과정과 참여

(1) 정부 형태와 정치 제도

(2) 정당 정치와 선거

(3) 정치 참여의 의의와 방법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 Vs 의원 내각제), 정당 제도 (양당제 Vs 다당제), 선거구 제도 및 대표 선출 방식 (다수 대표제 Vs 소수 대표제 Vs 비례 대표제), 정치 참여 집단 (정당, 시민 단체, 이익집단)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와 정당의 기능은 가끔 출제 되기도 합니다.

1. 다수당의 횡포 견제 수단은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대통령제)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시 해결 수단은 **내각 불신임권, 의회 해산권**입니다.

(의원 내각제)

2. 대통령제, 의원 내각제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합니다.

3. 의원 내각제에서 총리는 입법부를 해산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수장만을 단독으로 해임할 수 없습니다.**

4. **절대 다수 대표제** (결선, 선호 투표제) 는 결론적으로 과반을 넘긴 후보자가 당선 되므로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입니다.**

5. **여대야소** 는 의원 내각제나, 대통령제 중 양당제 에서, **여소야대** 는 대통령제 중 다당제 에서 발생합니다. (여소야대에서 의회와 정부의 대립, 갈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일원화** 와 **이원화** 에 대해서 개념 정립합니다.

대통령제 에서 행정부 수반과 국가 원수가 **대통령으로 일원화** 되어 있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따로 하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의원 내각제** 에서 **의회 선거 만으로 내각이 구성** 되기 때문에 **선거는 일원화** 되어 있고, **총리와 국가 원수의 권한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7. 의원 집정부제 (더 이상 수능 시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 1) 프랑스의 결선 투표제에 해당합니다.
- 2) 총리는 평상시에 행정권을 주도하고, 대통령이 국방이나 외교를 담당하지만, 국가 비상시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전반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 3) 대통령은 의회 해산이 가능하고,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가집니다.
- 4) 국민은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투표로 선출합니다.
- 5)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른 경우 동거 정부 형태가 나타납니다.

8. 우리나라 정부 형태 중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알아봅시다.

(직접적으로 출제 되기 보다는 주로 헌법 기관을 공부할 때 도움됩니다.)

의원의 각료 겸직 가능, 국무 총리제, 국무 회의, 대통령의 국회 출석 및 발언권,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권, 국회의 국무 총리, 각료 해임 건의권, 행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 있습니다.

(**의회 해산권과 내각 불신임권은 우리나라의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아닙니다.**)

9. 공천 방식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더라도 상식적으로 품시다.)

당원, 국민 경선은 상향식 공천 방식이고, 당 지도부의 공천은 하향식 공천 방식입니다.

국민 경선은 민의가 반영되므로, 민주적인 공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 일당제는 민주적인 정당 제도가 아니지만, **복수 정당제**는 민주적인 정당 제도입니다.

따라서, 양당제와 다당제 중 어느 것이 더 민주적인 정당 제도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11. 민주 선거의 4대 원칙을 알아 둡시다.

- 1) 보통 선거 Vs 제한 선거
- 2) 평등 선거 Vs 차등 선거 (인구 비례, 표의 등가성)
- 3) 직접 선거 Vs 대리 선거 (간접 선거를 넣기도 합니다.)
- 4) 비밀 선거 Vs 공개 선거

12. 1인 1표제 하에서 지역구 선거를 통해 자동적으로 비례 대표 후보가 선출 되는 과거의 투표 방식이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현재 판결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비례 대표 후보를 직접 선출 하지 못해 **직접 선거의 원칙에 위배** 되고, 지역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선택한 투표자와 그 외의 투표자의 **차등 문제가 발생** 해서 **평등 선거의 원칙에 위배** 된 것입니다.

13. **한 선거구 내**에서의 표의 등가성 문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 소수 대표제)

Vs **선거구 간** 표의 등가성 문제 (인구 편차, 인구 비례, 평등 선거)

14. 과대 대표는 **의석률**이 득표율보다 **높은 상태**를,

과소 대표는 **득표율**이 의석률보다 **높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15. 정치적 효능감은 개인의 참여가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의식이며, 이는 국민의 정치 과정 참여율을 높여 줍니다.

또한 정치적 신뢰감은 정부에 대한 믿음이며, 정책 지지율을 높여 줍니다.

16. 정치 참여 집단은 모두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집약하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17. 정치 참여 집단 (정당, 시민 단체, 이익 집단)은 **정부 정책을 집행 (정부 역할)** 하지 않으며, **법률안을 발의 (국회 역할)** 하지 않습니다.

18. 지방 선거 중 기초 지역구 대표 의원만 소수 대표제로 선출 합니다. (수특)

19. 행정 국가화 현상은 이익 집단의 확대 배경입니다. (정부의 힘이 세져서, 수특)

20. 학생들이 수능 직전에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1) 이익 집단이랑 시민 단체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은 알겠는데,

정당도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나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정당은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당의 설립 목적** 자체가 **대의제 그 자체** (정권 획득)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이익 집단과 정당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시민 단체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나요?

결론 부터 말하자면 여러분이 올해 이 선지를 볼 가능성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기출 선지나 EBS 를 분석 해봐도 이익 집단과 정당에 대해서만 물어볼 뿐 시민 단체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인강 선생님께서는 굳이 시민 단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의 식으로 말씀 하셨고, 마더텅 답지나 여타 선생님께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말해주지도 않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선지는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혹시 내신을 준비한다면, 담당 선생님께 시험치기 전에 물어 보십시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깔끔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저 혼자 만이 보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이 나오지 않는 선지는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III 헌법의 기본 원리

- (1) 우리나라의 헌법의 기초 이해
- (2) 기본권과 의무의 이해
- (3) 국가 기관의 구성과 기능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헌법의 기본 원리 (국민 주권주의, 자유 민주주의, 복지 국가의 원리, 평화 통일 지향, 국제 평화주의, 문화 국가의 원리)

기본권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청구권)

국가 기관 (국회, 행정부, 법원, 헌법 재판소,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가 있습니다.

이 단원을 공부할 때는 헌법 조문을 여러 번 읽어 보도록 합시다.

모든 EBS, 기출 선지 싹 다 정리하고 딱히 필요 없어 보이는 것 까지 모조리 정리했으니, 여기 내용 이외에 궁금한 게 있으면, 여기 내용 모두 체화하고 나서 여쭙 보십시오. 여기 있는 내용만 해도 상당한 양일 겁니다.

1. 재산에 관련한 자유 민주주의와 복지 국가의 원리 구분

자유 민주주의 : 재산의 불가침성, 재산권 보장,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복지 국가의 원리 : 경제에 대한 규제, 최저 임금

2. 자유 민주주의 (자유권 과 관련)

: 국가 기관 간의 상호 견제, 법치주의, 사법권의 독립, 신체의 자유 (5 단원에서 중요)
개인 정보 보호법 (정답률 18%)

3. 자유 민주주의 와 국민 주권주의 의 공통 선지 (배타적이지 않음)

: 복수 정당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지방 자치 제도

4. 복지 국가의 원리 : 실질적 평등, 적극적 개입

5. 모든 헌법의 기본 원리는 법률 제정과 정책 결정의 방향 (해석의 기준) 을 제시합니다 .

6. 국제 평화 주의 는 상호 주의 원칙 이지만, 외국인에게 모든 기본권을 **동일하게 보장 해주자** 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아닙니다** . 또한 침략적 전쟁을 부인했을 뿐이지, 모든 전쟁을 하자거나 반대 하자는 건 틀린 선지입니다 .

7. 교육 에 관한 헌법의 기본 원리

복지 국가의 원리 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라는 선지가 나오고,

문화 국가의 원리 에서 평생 교육, 의무 교육을 받을 권리 라는 선지가 나옵니다 .

(이는 문화 국가의 원리가 복지 국가의 원리에서 일부 파생되어 명확하게 구분되는 선지는 아니지만, 각각의 선지 내용을 알아두도록 합시다.)

8. 자유권 (자유 민주주의) : 국가 **로부터의** (from) 자유, 18C

참정권 (국민 주권주의) : 국가 **에의** (to) 자유, 19C

사회권 (복지 국가의 원리) : 국가 **에 의한** (by) 자유, 20C

9. 형식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도 같게** (정치적 영역, 기회의 평등)

실질적 평등 :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사회 복지 영역, 결과의 평등)

10. 다른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본질적 기본권) : **평등권**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수단적 권리) : **청구권**

11. **사회권** : 급부 (국가에 일정한 행위) 를 요구, 생존권적 기본권, 현대적 권리,
by 바이마르 헌법

12. **청구권** :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권리**

Ex) 청원권, 국가 배상 청구권,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 형사 보상 청구권, 재판 청구권, 헌법 소원 심판 청구권...

13. **자유권, 평등권**

(소극적 권리, 천부 인권성,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X, 외국인도 똑같이 인정)

Vs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적극적 권리,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O, 외국인에게 똑같이 인정 X)

14. **상임 위원회** (전문성 O, 효율성 O, 국정 감사, 인사 청문회, 의안 심사)

Vs **교섭 단체** (국회 운영의 능률성, 효율성 O, 같은 정당일 필요는 없더라도 20인 이상)

15. 예산 편성, 예산 집행 : **정부**

예산 심의, 예산 의결, 예산 확정, 결산 심사, 국정 감사 (매년), 국정 조사 : **국회**

결산 검사, 회계 검사, 공무원 직무 감찰 : **감사원**

16. 국무 회의 (**의결 기관 X**, 심의 기관 O) 의 심의

: 모든 행위에 대해서 심의 X (중대한 특정 행위만), 대통령에게 **강제성 X**

17. **헌재 재판관** (9인)

: 국회 3인 선출, 대법원장 3인 지명, **대통령 9명 모두 최종 임명권** (확정)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

: 국회 3인 선출 (확정), 대통령 3인 임명 (확정), 대법원장 3인 지명 (확정)

18. 탄핵 **소추** 권 (**국회**): 직무 권한 일시 정지

탄핵 (**심판**) 권 (**헌법 재판소**): 파면

19. 국무 총리 : 국무 위원 임명 제청권, 해임 건의권을 가짐

20. 국회 의장 : 당적 보유 X, 정당 X, 국회에서 선출

캐스팅 보트 X (찬성 반대 수가 같은 가부동석일 때 국회 의장의 마지막 한 표로 결정 X)

21. 정치적 중립 : 국회 의장, 법관, 헌재 재판관

22. **상소 제도** (항소, 상고, 항고, 재항고 모두 포함)

판결 불복 : 항소 (1심에서 2심), 상고 (2심에서 3심)

결정 불복 : 항고 (1심에서 2심), 재항고 (2심에서 3심)

23.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 심사권 : 모든 법원

명령, 규칙에 대한 위헌, 위법의 **최종** 심사권 : 대법원

24. 선거 소송 (선거의 유, 무효) **Vs** 선거법 위반 소송 (형사 소송)

25. **심급 제도** (대부분 3심, 항상 상고심은 대법원)

1) 1심이 지방 법원 **단독부** (1명) 면 2심은 지방 법원 **합의부** (3명)

2) 1심이 지방 법원 **합의부** (3명) 면 2심은 **고등 법원**

3) 특히, 지방 선거 (지방 자치 위원 등등) 재판은 **2심**

4)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 자치 단체장, 비례 대표 광역 의원 선거 재판은 **단심**

5) 비상 계엄 하 군사 재판은 단심 (사형은 3심) **시험 X**

26. 헌법 재판소의 권한

- 1) 위헌 법률 심판 제도 (by 법원)
- 2) 헌법 소원 심판 제도 (by 국민)
- 3) 정당 해산 심판 제도 (by 정부)
- 4) 탄핵 심판 제도 (by 국회)
- 5) 권한 쟁의 심판 제도 (by 국가 기관끼리, 지방 자치 단체 끼리, 서로서로)

1), 2), 3), 4) 는 6 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

5)는 7 인 이상 출석이 필요하고 그 중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수능 X)

27. 헌법 소원과 위헌 법률 심판

(대법원에 상고 X, 재항고 X, 재심 X, 국민 모두에게 심판의 효력이 발생)

1) 헌법 소원 (by 국민)

: 법률 위반의 관계와 상관 없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신청

1)-1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 재판을 전제로 함,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 되어야만 할 수 있음

1)-2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 재판을 전제로 X,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고 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할 수 있음

2) 위헌 법률 심판 제도 (by 법원)

: 재판을 전제로 함, 재판 정지 O, 국민의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법원의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음, 위헌으로 결정되면 국회는 법률 개정 해야함

28. 국회의 동의

1)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

: 중요한 조약 체결, 선전포고 및 강화, 일반 사면, 예비비 설치, 긴급 명령권 (대통령령 과 다름), 임명권 (헌법 재판소장, 국무 총리, 대법관, 감사원장, 대법원장 등)

2)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것

: 헌법 개정안 발의, 국민 투표 발의권, 대통령령 발포, 특별 사면, 임명권 (국무 위원)

Cf) 일반 조약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29. 입법 과정 (순서 반드시 알아두기)

1) 법률안 제출 (발의) : 위원회, 국회 의원 10 인 이상, 정부 (의원 내각제적 요소)

2) 법제 사법 위원회 (상임 위원회 경우 이후) : 법률안의 체계, 자구 심사

3) 법률안 의결 이후 : 대통령에게 이송 후 15 일 이내 공포 Or 재의 요구 (환부 거부, 법률안 거부권 행사)

4) 법률안 재의결 통과할 때 법률로 확정됨, 이송 후 대통령이 5 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리해서 할 수 있음, 법률안은 20 일 이내에 효력 발생

5) 헌법 개정 : 대통령 의 20 일 이상 공고, 공고일로부터 60 일 이내 의결,

의결일로부터 30 일 이내 국민 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권자 과반수 찬성,

이때 헌법으로 확정), 대통령은 즉시 공포 해야 함

30. 의결 정족수 총 정리 (이것 이외에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1) 일반 정족수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중 과반수 찬성

법률안 의결 (10 인 이상 **발의**) 및 특별 정족수를 뺀 나머지 대부분

2) 특별 정족수

- 재적 의원 1/4 : 임시회 소집 요구 (대통령도 가능), 국정 조사 (시험 x)
- 재적 의원 1/3 :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탄핵 소추 **발의**
(시험 X)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 **발의**
- 재적 의원 과반수 :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탄핵 소추 (to 현재)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 (to 대통령, 강제성 X)
대통령 탄핵 소추 **발의**, 국회의원 제명 **발의**, 헌법 개정 **발의**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2/3 : 법률안 재의결
- 재적 의원 2/3 : 대통령 탄핵 소추, 국회 의원 제명 (탄핵 X), 헌법 개정 의결

31 번부터는 EBS 에 나온 선지 입니다. (p 71, 73)

31. 피선거권의 자격에 연령을 규제함 : 합리적 차별 (실질적, 상대적, 비례적 평등)

32. 무죄 추정의 원칙 : 실체법보다 절차법에 더 많은 비중을 둔다.

33. 사회권 : 원칙적으로 국민만 인정,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 낮음, 주로 입법권을 구속
자유권 : 외국인도 인정, 재판 규범으로서의 성격 O, 모든 국가 권력 구속

IV 개인 생활과 법

- (1) 민법의 기초
- (2) 권리의 침해와 구제
- (3) 생활 속의 법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 민법의 기본 원리 (근대 - 소유권 절대, 계약 자유, 과실 책임)
(현대 - 소유권 공공 복리, 계약 공정, 무과실 책임)
- 계약 (특히 미성년자의 계약)
- 불법 행위 (일반 불법 행위, 특수 불법 행위)
- 민사 소송 절차
- 상속 (이혼, 유류분, 법정 상속 순위, 양자, 친양자)

부동산 거래 절차 (매매, 임대차) 가 있습니다.

4 단원은 한 번 제대로 공부해 놓으면 타 단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울게 없어지는 단원입니다.

한 번 할때 제대로 공부합시다.

1. 근대 민법의 원칙이 현대 사회에서 수정되었다는 의미는 기존원칙이 철폐되고 새로운 내용으로 완전히 변경된 것이 아니라, 기존 원칙은 유지하되, 새로운 내용을 보완하자는 겁니다.

2. 무과실 책임의 원칙은 과실 책임의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제조물 책임법,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 등이 있습니다.

3. 민법의 기본 원리는 기출에 등장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합시다.
(예를 들어, 계약 공정의 원칙은 약관 규제법, 근로 계약서,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은 개발 제한 구역 설치 등)

4. 무효는 계약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는 의사 무능력자 (정신 병자, 심신 상실자, 만취자, 어린이), 계약 공정의 원칙에 어긋난 계약 (황견 계약), 실현 불가능한 계약, 사회 질서의 반하는 계약이 있습니다.

반면 취소는 일정기간 내에 하면 계약 당시로 소급해서 무효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추인하면 법률 효과가 확정됩니다. 이는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의 계약, 사기.강박.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이 있습니다.

5. 계약 후 소유권은 제품을 인도받은 후에 발생합니다.

계약 체결해도 아직 택배가 집에 안 오면 소유권은 없는 겁니다.

6. 취소, 무효한 경우 채무 불이행의 책임도 지지 않고 위약금도 안 줘도 됩니다.

7. **확답을 요구할 권리** (촉구권) 은 **법정 대리인에게만** 청구하고,

미성년자와 계약 한 것을 알 때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철회권** 은 미성년자와 계약 한 것을 **모를 때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성년 의제라고 하더라도 민법에서만 성인으로 간주하는 것이지,

형법상 소년법을 적용받고, 투표권 (19) 도 없으며, 배심원 신청 (20) 도 할 수 없습니다.

9. 일반 불법 행위, 특수 불법 행위 정리

1) 책임 무능력자는 책임 능력이 없어서 책임을 지지 않지만,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인 법정 대리인은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과실 책임)

2) 책임 능력자는 책임 능력이 있어서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고,

책임 능력자의 감독자인 법정 대리인도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과실 책임)

3) 피용자는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지지만,

피용자의 감독자인 사용자는 특수 불법 행위의 책임을 집니다.

(업무 관련, 과실 책임)

10. 과실 상계 (시험 X): 가해자의 손해 배상액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제하는 것 입니다.

11. 내용 증명 우편 (우체국에서), 민사 조정 제도 (양측 합의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소액 사건 심판 제도 (3 천만원 밑으로), 공증 (집행력이 있으면 민사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 가능), 가압류 (소송 절차 언제라도 법원에게 신청) 와 같은 것은 **모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12. 손해 배상은 **금전 배상이 원칙**입니다. (원상 복구가 원칙은 X, 선택권은 있음)

13. 재산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위자료) 도 있습니다.

14.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책임은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15.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 (1 차적) 은 **과실 책임**이지만,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 (2 차적) 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16. 강제 집행은 피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것 입니다.
(피해자가 법원에게 강제 집행 신청을 할 뿐, 정답률 41 %)

17. 성년 의제가 되면 이혼 하더라도 성년으로 간주됩니다. (시험 x)

18. **사실혼** 도 부부 간 협조.부양의 의무, 일상 가사 대리권을 가지고 관계 해소시 손해 배상을 해야 하지만, **법률혼과 달리 부부간의 친족 관계는 없으며, 상속도 안 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나 인지된 혼인 외의 자는 부모 각각과 친족 관계를 맺으며,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 **협의상 이혼** : 이혼 숙려 기간 (미성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혼 신고 시 이혼의 효력 발생

재판상 이혼 : 민법의 사유가 필요함, 조정 절차를 거침,
판결 확정 시 이혼의 효력 발생

20. 유류분은 유효한 유언이 전제 되어야만 합니다.

이는 배우자나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1/2 까지, 직계 존속이나 형제 자매는 1/3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에서 유류분 이상의 상속을 받는다면 유류분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21. 대습 상속과 기여분은 현 교육과정이 아닙니다. (기출 풀 필요 X)

22. 임대차 계약 만료 1 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의 의사가 없으면, 계약 내용이 그대로 자동적으로 이어집니다.

23. 매매 절차 시에 계약금 지급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도자 (파는 사람) 는 계약금의 2 배를 내야 하며, 매수자 (사는 사람) 는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으로는 계약을 취소하기 힘듭니다.

24. 임차권,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는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25. 이해 당사자가 아닌 누구라도 등기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6. **대항력** 은 이사와 전입신고 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거주를 주장할 권리인데, 예를 들어 바뀐 집주인이 나가라도 해도 안 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선 변제권 은 이사와 전입신고, 확정 일자 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후순위 물권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으로 보증금을 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은 소액 임차인이 대항력 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보증금 중 일부를 가장 먼저 변제 받을 권리입니다.

V 사회 생활과 법

- (1) 형법의 의의
- (2)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 (3) 사회법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죄형 법정주의, 범죄의 성립 요건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
형사 절차 (수사, 재판, 집행), 소년 범죄 사건, 권리 구제 제도, 사
회법, 근로 계약, 근로자의 권리 (피해 구제), 소비자의 권리 (피해
구제) 가 있습니다.

1.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과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면** 유추 해석을 할 수 있거나, 행위 시의 법률이 아닌 신법으로 재판 할 수 있습니다. (보장적 기능)

2.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행위 당시의 판례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법률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3. **심신 미약자와 농아자는 책임 조각이 되지 않습니다.** 책임 감경에는 속하나 책임 감경은 시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4. 친구의 허락을 받고 친구 부모님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아버지라서)

5. 반인륜적 행위 (살인 등) 은 피해자가 허락하더라도 피해자의 승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6. **형벌과 동시에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을 수는 없지만, 형벌과 동시에 보안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벌과 보안 처분은 형사 재판에서 나오지만, 보호 처분은 가정 법원 소년부에서 나온) 또한 형벌, 보안 처분, 보호 처분 모두 범죄 예방의 목적을 가지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되어야 합니다.

7. 자신에게 피해를 준 동물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 합니다.
(수능에서는 X)

8. **유죄 판결이 확정** 되면 형사 보상 청구권과 명예 회복 제도는 이용 할 수 없습니다.
(선고 유예, 집행 유예)

9. 판결이 내려진다고 재판이 끝나거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항소심과 상고심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 **구속 적부 심사 제도**는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신청하고,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합니다.

또한 구속된 피의자는 **무죄 취지로 풀려날 때 검찰청에 형사 보상 청구권**을 신청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은 **무죄 취지로 풀려날 때 법원에 형사 보상 청구권**을 신청합니다. 또한 구속된 피고인은 **무죄 취지로 풀려날 때 검찰청에 명예 회복 제도를 신청**합니다.

11. 집행 유예는 일정 기간 후에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선고 유예는 일정 기간 후에 형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 (면소) 됩니다. 집행 유예와 선고 유예를 받으면 석방 되어 바로 집으로 갑니다. (바로 복역 X)

12. 국민 참여 재판

피고인이 형사 재판 1심 중 합의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배심원은 20세 이상이어야 하며,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따른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경우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은 신속성, 효율성, 전문성은 떨어 지지만, 정당성, 투명성은 보장 됩니다.

13. 배상 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청 만으로 민사상 손해 배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4. 구속 영장 청구와 형의 집행은 검사가 하고,
구속 영장 발부와 형의 선고는 판사가 합니다.

15. 기소는 검사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원은 불기소 처분 할 수 없습니다.

16. 선도 조건부 기소 유예는 기소 될 수 있는 나이인 14세 이상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검사의 고유 권한입니다.

17. 즉결 심판은 검사가 아니라 경찰서장이 청구합니다. (수능 X)

18. 생명, 신체에 피해가 없다면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9. 10세 미만은 형벌도 받지 않고 보호 처분도 받지 않습니다.

20. 형벌과 달리 보호 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21. **공소 시효가 지나면** 기소 유예를 하는게 아니라 **불기소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22. **사회법**은 사회, 경제적 강자로부터 사회,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지,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사회법은 실질적 평등을 보장합니다.

23. **연소 근로자는 15, 16, 17 세의 나이**로 보건상 유해한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15 세 미만은 고용 노동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근로할 수 있습니다. (시험 X)

24. **미성년자**가 근로 계약을 체결 하기 위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금은 단독으로 받습니다.

25. **부당 해고** (서면으로 해야함) 와 **부당 노동 행위** (근로 3 권) 는 사례를 통해 구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는 노동 조합도 청구 할 수 있으며**,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의 사례과 예시를 제시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26. 근로 시간

일반 근로자는 하루 8H, 일주일 40H, 연장 일주일 12H 이고,

연소 근로자는 하루 7H, 일주일 35H, 연장 하루 1H, 일주일 5H 입니다.

또한 **연장 근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조심스럽게 작년에 바뀐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은 수능에 안 나올거라고 예측합니다.

27. 임금은 직접, 통화로, 최소 한 달에 한번은 지급해야 합니다.

28. 근로 계약 내용 중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내용만 무효**입니다.

계약 내용 전체가 무효는 아닙니다.

29.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민사 소송, 3심제)**은 행정 절차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 재판 신청과 노동 위원회에의 재심은 일정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 (기간 알 필요 X)

30. 노동 위원회의 재심 절차와 관계 없이 행정 소송은 3심제로 이루어 집니다. (노동 위원회는 법원이 아니기 때문에, 5심제가 아니라 행정 소송은 3심제 입니다.)

31. **제조물 책임법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또한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 되기 때문에, 인과 관계가 없음을 제조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32. 한국 소비자들의 권고와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33.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절차 중에 **민사 소송을 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34. 청약 철회는 일정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기간 알 필요 X)

VI 국제 사회의 법과 정치

- (1) 국제 사회의 이해
- (2) 국제 관계와 국제법
- (3) 국제 분쟁의 해결

이 단원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 하는 소재는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자유주의 , 현실주의), 국제 연합 UN (총회 , 안전 보장 이사회), 국제법의 법원 (조약 , 국제 관습법 , 법의 일반 원칙) 등이 있습니다 .

(국제 정치사가 나오지 않는 추세입니다 . EBS 만 숙지합시다 .)

1. IMF, 세계 보건 기구는 비정부 기구가 아니라 정부 간 국제기구이다 . (딱 깨놓고 말하면 중요한 선지는 아닙니다 . EBS 에 등장하는 정도만 봐두어도 충분합니다 .)

2. 국제 평화 유지 방법 (전략) 확실히 숙지하기

세력 균형 → (힘에 논리에 의한 **현실주의** , 동맹 전략)

Vs **집단 안보** → (상호 협력을 위한 **자유주의** , 국제 기구 , 규범)

3. 중앙 정부 존재 X → **현실, 자유주의**

무정부 상태로 간주 (홉스식 자연 상태) → **현실주의**

4. 제 1 차 세계 대전 → 국제 연맹 (1920) → 제 2 차 세계 대전 → 국제 연합 (1945) (국제 연맹의 한계를 보완)

5. 트루먼 독트린, 마셜 플랜, 바르샤바 조약 기구, 북대서양 조약 기구 (냉전 강화)

Vs 닉슨 독트린, 제 3 세계 (냉전 완화)

Vs 몰타 선언 (냉전 종식)

6. 국제 연합의 경제. 사회. 인도적 활동 지휘, 관리 → **안전 보장 이사회의 역할** 아님.

(경제 사회 이사회의 역할이지만 안보리가 아닌 것만 기억해둡시다.)

7. 총회, 안보리가 국제 사법 재판소에 대해 법적 문제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견은 권고적인 성격을 띠므로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8. 국제 연합 가맹국, **비가맹국** (국가) 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요청 할 수 있지만, **개인이나 국제 기구는 재판을 요청할 수 없다.** (조약은 국제 기구도 체결 가능합니다.)

9. 국제 사법 재판소에 재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분쟁 당사국들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국내 재판과의 차이점)

10.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법으로 **만** 재판하고, 국내법으로는 재판 하지 않습니다.

11. 총회 의결은 과반수 찬성 또는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수능 출제 요소 X**,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12. 국제 사법 재판소는 국제적으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역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만 숙지하면 됩니다.)

13.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시점은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했을 때 입니다. (기출에서 여러 번 각주로 등장했습니다.)

14.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은 체결, 동의, 비준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선지)

15. 신사 협정은 국제법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출 1 회, 중요도 X)

16. 판례와 학설은 국제법의 법원에 속하지만, 국제 사법 재판소가 이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보조 수단일 뿐)

17. 국제법은 **강제적으로 집행할 기구가 없습니다.** (국내법과의 차이점)

→ 수특에 등장하는 국제 포경 규제 협약을 참고합시다.

18. 모든 비상임 이사국은 매년 5 개국씩 선출되며 (**시험에서 안 나옴**), 임기 기간은 2 년 입니다. (수특에서 임기 기간이 등장하긴 하지만, 상임 이사국이 5 개국인 것과, 비상임 이사국만 투표로 선출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15 명의 재판관을 서로 국적이 다릅니다.)

19. 국제 관습법과 법의 일반 원칙의 예시를 **반드시** 암기합시다.

국제 관습법: 내정 불간섭, 외교관의 면책 특권, 포로의 인도적 대우, 대량 학살 금지

법의 일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손해 배상의 원칙

20. 헌법 6조 1항에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법률로 외우는 학생이 많을텐데, 무조건 국내법이라고 외웁시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국회의 동의를 필요 없어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국내법의 명령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무조건 국내법이라고 외웁시다.)

21. 국제법은 그 법을 위반하려는 국가와 그로 인해 희생이 따를 국가가 어디인가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융통성 있는 표현으로 표명된다.

(현실주의라고 합니다, 수특 선지)